

<별첨>

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

2022. 6.

기 획 재 정 부

순 서

I . 추진배경	1
II .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	2
1. 그간의 성과	2
2. 현황 및 문제점	3
III . 비전 및 추진체계	4
IV . 중점 추진 과제	5
1. 대상시설 다양화	5
2. 민간 참여유인 제고	8
3. 민자 관리체계 혁신	11
V . 향후 추진일정	12

I. 추진배경

□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뒷받침 필요

- 민간이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, 정부가 재정·제도적 뒷받침하는 민자제도를 활성화하여 역동적 혁신성장의 디딤돌로 활용
- 사회기반시설 건설에서 민간투자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시장·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및 민간주도 성장에 기여 필요

□ 정부 재정만으로 신규인프라 확충·노후인프라 개선 한계

- 미래 지향적 인프라 조기 확충 및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노후 인프라 유지·개선* 필요성 증대

* 연 12조원('19년 기준) 수준인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('30년) 26조원 → ('40년) 39조원 → ('50년) 52조원으로 급증 전망(국토부, '21.12월)

- 반면, 상시화된 위기 대응, 사회복지 분야* 재정지출 소요 확대 등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투자 여력에 한계

* 복지분야 비중(총지출 대비, %): ('10) 27.7 ('15) 30.8 ('18) 33.7 ('20) 35.2 ('22) 35.8

□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

-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민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 산업·생활·교통 인프라 등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
- 민자사업은 신속한 민간자본 투입, 공기준수 등으로 재정사업 대비 조기 준공 및 필수시설 적기 확보 가능

* 전체 사업추진기간(도로, KDI, '21) : (재정) 196.4개월, (민자) 166.3개월

⇒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,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필요

II.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

1 그간의 성과

□ 민자제도는 경제활성화 및 주요 기반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

* 95년 이후 약 134.5조원 민자사업 추진

- **(주요시설확충)** 고속도로·광역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*을 조기 확충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

*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(1.7조원, '95년), 부산신항 1단계(2.4조원, '97년), 광명-서울 고속도로(1.9조원, '12년), GTX-A(3.1조원, '18년) 등

- **(편의제고)** 생활형SOC, 환경시설 확충*을 통해 국민편의 향상

* 대구시립미술관(567억원, '05년), 천안시폐기물 소각시설(999억원, '12년) 등

- **(공공성 강화)** MRG 제도폐지('09년),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(재정으로 대비 1.1배 목표)* 등을 통해 재정 및 이용자 부담 경감

* 「통행료 인하 로드맵('18.8월, 관계부처 합동)」

□ 사업기간 단축, 비용절감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및 재정부담 완화

- **(건설단계)** 민간 창의·효율을 활용하여 공기단축*·공사비 절감**

* 재정사업 대비 공기 단축('21년, KDI) : (도로) 약 △33개월(민자 57, 재정 90개월)
(환경사업) 약 △13개월(민자 32, 재정 45개월)

** 재정사업 대비 건설사업비 절감('21년, KDI) : (도로) 4.2%, (환경사업) 24.3%

- **(운영단계)** 건설·운영 통합 발주로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유지관리 가능

* 하수처리장 사업: 재정사업 대비 '17~'19년간 평균 약 29.3% 운영비 절감('21년, KDI)

2 현황 및 문제점

□ 민자시장은 부정적 인식 및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감소 추세

○ 민자사업 건수 및 규모는 '07년 최고치 이후 지속 감소 중

* 민자사업 건수(개): ('00) 11, ('05) 26 ('07) 119 ('10) 52 ('15) 16 ('21) 20 (실시협약 체결기준)

** 민자사업 규모(조원): ('00) 2.6, ('05) 8.5 ('07) 12.3 ('10) 8.2 ('15) 5.7 ('21) 1.3 (실시협약 체결기준)

- 공공성 강화를 위한 MRG 폐지에도 지속 지급되는 재정지원, 높은 요금 등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

* 연도별 MRG 지급액(억원) : ('18) 3,739 ('19) 3,384 ('20) 3,766 ('21) 3,581

- 또한, MRG 폐지 등에 따른 사업 Risk 증가 및 수익성 하락*으로 민자사업 참여 유인 저하

* BTO사업 평균 세전 수익률(%): ('00) 10.3 ('05) 7.8 ('10) 5.7 ('15) 5.6 ('20) 5.0

□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상시설·사업방식 다양화 미흡

○ 민간투자가 산업화 시대 주요시설인 교통인프라 신규투자에 집중*되어 있으며, 사업방식도 BTO, BTL 주도로 제한적

* 민자사업 중 도로·철도 비중: ('19년) 74.4% ('20년) 81.7% ('21년) 84.9%(집행규모 기준)

□ 수익성 확보를 위한 부대사업 추진에 애로

○ 투자비 보전* 등을 위한 부대사업은 다양한 사업모델 부족, 관련기관 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추진 애로

* 교통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수익성 높은 도로·철도 등 신규 사업 물량 부족

□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

○ 적격성조사·사업고시·실시협약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민간 사업시행자의 참여 유인 저하

* 착공 전 계획·조사·설계기간(도로, KDI, '21) : (재정) 58.3개월, (민자) 98.5개월

Ⅲ. 비전 및 추진 체계

목표

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 성장 지원

- 민간의 창의·효율을 활용, 제2의 민자 활성화 분위기 조성 -

3 대 전략

- ◇ 교통 중심의 **대상시설**을 산업·생활·노후 등으로 **다양화**
- ◇ 사업모델 개선, 추진부담 완화 등 **민자 참여유인 제고**
- ◇ 재정·민자간 연계 강화 등 **민자 관리체계 혁신**

대상시설 다양화

① 산업 인프라

- ▶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산업 기반 시설 등에 대한 민자추진 검토
- ▶ 산단 완충저류시설, 환경복합시설, 수소 충전소, ICT 사업 등 대상

② 생활 인프라

- ▶ 복지·문화·체육시설 중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가능한 시설 민자추진 검토
- ▶ 단일 시설만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다수시설은 동시에 복합 개발

③ 노후 인프라

- ▶ 노후화로 성능 개선, 시설 안전성 강화 등이 필요한 대상시설 발굴 확대
- ▶ 노후 상수도 개량, 국립대 시설개선,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 대상

④ 교통 인프라

- ▶ (도로) 고속도로 지하화 등 既 구축 교통망의 기능보완 노선 등 민자추진 검토
- ▶ (철도) 광역철도, 기타 수익성 확보 가능 노선 등 민자 추진 검토

10 대 추진 과제

민자사업 참여유인 제고

① 사업방식 다변화

- ▶ (개량운영형 도입) 기존 인프라 중 노후화로 시설개량이 필요한 시설 발굴
- ▶ (혼합형 확대) 공익목적상 사용료 인상이 어려운 시설 등 대상

② 수익 패러다임 전환

- ▶ (사업모델 개발) 본사업시설의 상하부 등과 수익창출 사업을 연계
- ▶ (제도개선) 부대사업 개발·검토기관 확대, RFP 평가시 우대점수 부여 등

③ 절차·비용부담 완화

- ▶ (절차 신속화) 전문기관 역할 강화
- ▶ (비용부담 완화) 신용보증 최고한도 상향, 전략환경영향평가비 총사업비 반영 등

민자 관리체계 혁신

① 재정·민자사업간 연계 강화

- ▶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을 중심으로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가능성 적극 검토
- ▶ 예타통과 사업 중 민자 적격성 확보한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 검토

② 민간투자 사업대상 사전확정

- ▶ 사업유형별 상위계획 수립시 민자물량 할당 등 민간투자 사업대상 사전확정
- ▶ 국립대 시설개선, 산단 완충저류시설 등 상위계획 반영

③ 주무관청 전문성 강화

- ▶ 주무관청 사업 담당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온·오프라인 교육 추진
- ▶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 및 영상강의 자료 제공 등 추진

⇒ 민자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을 통해 年 평균 민간투자 규모는 기존 5조원에서 7조원*+a 수준으로 확대 기대

* 연평균 집행규모 5조원 + 신규 민자추진 1조원 + 기존 인프라 신규사업 발굴확대 1조원 = 7조원

IV. 중점 추진 과제

1 대상시설 다양화

- ◇ 기존 도로·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중심에서 산업·생활 인프라 확충, 노후시설 개량 등으로 대상시설 확대
 - 산업·생활·노후 인프라는 신규 대상시설 적극 발굴
 - 교통인프라는 재정-민자간 역할 분담을 통해 대상시설 선별

- ① **(산업 인프라)**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산업 기반시설 및 산업 인프라의 디지털화·친환경화 등 시설고도화 사업 민자추진 검토
- **(산단 완충 저류시설)** 사고수 유출에 따른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한 완충 저류시설 적기 확충을 위해 민자방식 도입 추진
 - 설치의무대상 잔여물량(90개) 中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은 민간투자 우선 검토(완충저류시설 BTL 시행지침, '21년 제정)
 - **(환경 복합시설)** 효율적 부지활용, 설치·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하수처리장, 소각시설 등 다수 환경시설을 복합개발
 -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시범사업* 확산방안 검토
 - * 바이오가스 처리시설(음식물, 하수슬러지, 가축분뇨) 복합개발시 국고보조율 10%p 가산
 - **(수소 충전소)** 수소 충전소 조기 구축('30년까지 660기) 지원을 위해 민자방식 도입·확산 추진
 - **(ICT 사업)** 첨단 ICT 기술 활용 스마트 인프라 관련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추진
- *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평가 항목을 시설사업기본계획(제3차 공고) 표준안에 반영

< 관련 사업 추진 현황 >

< 산단 완충 저류시설 >

- 정읍 제1~3산단 및 여수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'22년 BTL 한도액 반영 완료
- 창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'23년 한도액 요구
- 당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제안 사업 준비 중

< 환경 복합시설 >

-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시범사업 4개소 중 2개소(구미·칠곡, 청주) 민자 추진 중

② **(생활 인프라)** 복지·문화·체육 시설 중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민자 추진방안 검토

- (디지털 박물관) AI·IoT·MR(Mixed Reality, 혼합현실) 등 ICT를 활용한 입체감 있는 비대면 전시 콘텐츠 등 구축
 - 실감형·체험형 전시 등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, MR을 활용한 공연시설 유료화 등을 통해 수익 창출 가능
- (소규모 복합시설) 단일 시설만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다수시설(문화, 체육, 복지, 교육 등)을 동시에 복합 개발
 - 소규모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간이 적격성 조사 도입*, 제안서 검토기관 확대**, 시범사업 발굴·홍보 등 추진

* (기존)소규모 사업도 적격성 조사시 B/C 분석 수행 → (개선)적격성 조사시 B/C 분석 면제

** (기존)PIMAC만 복합화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가능 → (개선)전문기관까지 확대

< 관련 사업 추진 현황 >

< 디지털 박물관 >

- 부산 국립 해양박물관 디지털관 BTL 추진 중(해수부 예타신청 예정, '23.上)

③ **(노후 인프라)** 기존 사회기반시설 중 노후화로 인해 성능 개선, 시설 안전성 강화 등이 필요한 대상시설 발굴 확대

- (노후상수도 개량) 유수율 제고, 수질 개선 등 노후상수도 적기 개선(노후관 교체+스마트 관망*)을 위해 민자방식 도입 검토
 - * 원격 누수감시 시스템 등 관망 관리시스템 디지털화
 -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민자 물량 포함 협의(환경부)
- (국립대 시설개선) 신재생에너지 시설, 비대면 학습 환경 구축 등 노후 국립대 시설개선을 위해 민자방식 도입 추진
 - 전체 사업물량 中 일정비율 이상(예:50%) 민자추진 검토

- (노후청사 개발) 노후청사의 지속적 증가 전망에 따라, 개발 수요 대응을 위해 복합청사 개발* 등 민자방식 도입 검토

* (예시) 공공청사+청년임대주택+창업지원시설+문화·체육 등 주민편의시설

- 부처협의를 통해 개발 대상지 선정 및 민자추진 모델 수립

< 관련 사업 추진 현황 >

< 노후 상수도 >

- A 지자체 상수도 개량사업 민자 추진 계획 중

< 국립대 시설개선 >

- 국립대 시설개선 사업 BTL '23년 한도액 요구

4 (교통 인프라)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등 중장기 도로·철도 교통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적극 지원

- (도로) 既 구축 교통망의 기능보완 노선 등 민자 추진 검토

※ (주요 사업대상) ①간선도로망 보완, ②고속도로 지하화, ③신도시 교통망 구축 지원, ④예타 통과했으나 미착공 중인 고속도로 등

- (철도) 광역철도는 원칙적으로 민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, 기타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노선도 민자 추진 검토

< 관련 사업 추진 현황 >

< 도 로 >

- (적격성조사) 공주 천안, AH1(양재-고양), 시흥-수원, 다산 지하차도, 제2영통연결, 하남-남양주 포천
- (제3자 공고안 검토) 사상-해운대 고속도로
- (실시협약안 검토) 서창-김포, 발안-남양, 동부간선 지하화

< 철 도 >

- (제3자 공고안 검토) GTX-B(7월중 제3자 공고 예정), 대장-홍대선
- (실시협약안 검토) GTX-C

2 민간 참여유인 제고

◇ ①사업방식 다변화, ②수익 패러다임 전환, ③절차·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민자사업 참여유인 제고

① **(사업방식 다변화)** 기존 BTO, BTL 주도의 제한적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, 대상사업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방식 마련

① **(개량운영형 도입)**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노후 인프라 적기 개선을 위해 개량 운영형 민자방식* 신규 도입 추진

* 민간사업자가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·증설한 경우, 전체 시설에 대해 관리 운영권을 설정해주는 민간투자방식

※ 향후 10년간('22~'31) 관리운영권 만료 예정인 민자사업 현황 : 354개, 19.6조원

▪ 추진근거 마련, 사업모델 개발, 사업추진 방식 구체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 도입을 뒷받침

세부과제	주요 내용
추진근거 마련	▶ 개량 운영형에 대한 명확한 추진근거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에 개념 정의 및 추진방식 관련 조항 신설(기본계획 제2,3조 개정)
사업모델 명확화	▶ 기존의 시설 준공을 위한 총사업비(CCI)를 개량·증설비용(RCI)으로 변경하여 수익률·사용료 결정식을 명확화(기본계획 제11조 개정)
분석 방법론 및 절차 간소화	▶ 타당성 분석 범위가 전체시설이 아닌 개량·증설된 일부로 특정함을 반영하여 별도의 분석 방법론을 마련(세부요령 마련) ▶ 관리이행계획 수립시 타당성·민자적격성 판단 등을 완료한 경우, 해당 결과를 활용하여 타당성 분석 절차를 같음
금융부담 완화	▶ 기존 사업 운영을 통해 수요위험이 상당부분 감소한 만큼,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수요위험이 없는 BTL 사업 수준으로 하향* * (기존)수익형 15%(건설기간), 10%(운영기간), 임대형 5~15% → (개량형)5%까지 하향
재정시설의 민자전환	▶ 개량·증설이 필요한 기존 재정시설을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으로 전환·추진하기 위한 근거 명확화
세부요령 마련	▶ 개량 운영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절차, 타당성 분석 방법론 등에 관한 세부요령 마련

② **(혼합형 확대)** 총투자비 규모가 크지만 요금 통제 필요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 등을 중심으로 BTO+BTL 혼합형* 확대

* 총 민간투자비를 이용자 사용료(BTO)와 정부지급 임대료(BTL)로 회수

▪ 철도, 환경 등 시설유형*에 대한 혼합형 민자방식 확산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등 추진

* 낮은 수익률로 BTO 추진이 불가능한 저수익률 철도, 환경 사업등 중심으로 발굴

< 관련 사업 추진 현황 >

- 대장-홍대선 적격성조사 완료 후 제3자 공고안 마련 중

② **(수익 패러다임 전환)** 본사업과 부대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제도개선

⇒ 복합·연계개발 활성화를 통해 ①**사용료 절감** 및 **국민부담 감소**,
②**집적화**에 따른 **주민 편의 제고** 및 ③**지역경제 활성화** 가능

① **(사업모델 개발)** 본사업 시설의 상·하부, 근접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수익 창출 가능 사업을 발굴하여 연계형 사업모델 개발

- (예시 : 부대사업 연계형) 광역철도 건설시 역세권 복합개발 (철도역사+공공주택, 수익시설 등) 추진

* 역세권 복합개발시 입주시설 구체화 등 모델 개발 및 성공사례 확산 유도

- (예시 : 결합형) 우수·저류시설 건설시 상부는 신재생 에너지, 체육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건립

② **(제도개선 방안)** 부대사업 개발·검토기관 확대, 부대사업계획 제출 민간사업자에 우대점수 부여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

- (개발·검토기관 확대) 부대사업 발굴 지원을 위해 부대사업 개발·검토기관(기존 PIMAC만 가능)을 전문기관까지 확대

* 기본계획 제61조 제4항 개정 필요

- (우대점수 반영) 입찰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‘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’ 등 부대사업 추진계획 제출시 우대점수 부여*

* 시설사업기본계획(제3자 공고) 표준안에 우대점수 부여방안 포함

- (협의회 지원) 부대사업 관련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, 관계기관간 협의회 운영 지원(필요시 기재부에서 쟁점 조정 지원)

※ (기본계획 제62조②) 주무관청은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신속한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**③ (절차·비용부담 완화 등) 절차 신속화, 신용보증 한도액 상향 등
절차·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추진 부담 경감**

**① (전문기관 역할 확대)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검토·추진 등을
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기능을 추가·확대**

*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안(RFP) 작성 지원, 부대·부속사업 개발 및 검토 등으로
전문기관의 역할 확대

**② (취소·철회사업 보상기준 개선) 재정사업 전환 등 주무관청
사유에 따라 취소·철회된 사업들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**

* (기존)협상중인 민간투자사업을 주무관청의 사유로 취소·철회시(재정사업 전환 포함)
우선협상자에 대한 보상기준 불명확 → (개선)보상기준 신설(기본설계비의 70~90%)

**③ (전략환경영향평가비 총사업비 반영) 최초제안자의 비용부담
완화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***

* (기존)전략환경영향평가 비용이 총사업비에 미반영되어 최초제안자 부담 가중
→ (개선)전략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총사업비 중 부대비 항목에 반영

**④ (신용보증 한도액 상향) 최근 GTX 등 대규모 민자사업이 진행되는 점
등을 고려하여, 산업기반신용보증의 신용보증 최고한도액 상향***

* (現) 사업당 한도 5,000억원 → (改) 7,000억원(+2,000억원)

**⑤ (인프라펀드 세제지원 연장) 민간자금의 인프라펀드 가입
확대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세제지원* 연장 검토**

*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공모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을 투자금액
1억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(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, '22년말 일몰예정)

**⑥ (우대점수 가이드라인 마련) 동종·유사 사업간 불합리한 편차
발생 방지를 위해 주무관청 대상의 평정 가이드라인* 마련**

* 대상시설 유형별로 제시된 점수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 부여 가능한 사례 등 제시

3 민자 관리체계 혁신

◇ ①재정·민자사업간 연계 강화, ②민자 사업대상 사전확정, ③주무관청 전문성 제고 등 민자 관리체계 혁신 추진

1 (재정·민자사업간 연계 강화) 필수 민자검토대상*에 대한 민자 적격성 검토 강화를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가능성 적극 검토

* 재정·민자사업 간 연계 강화 및 정부고시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료도로·철도 등은 예타 조사시 필수적으로 민자적격성 판단 병행(단 ①수익성미흡, ②예타면제사업, ③BTL은 제외)

- 예타조사 이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민자적격성 검토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

※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4조 및 예타 수행총괄지침 제52조 개정 필요

구분	기 존	개 선
판단 주체	▶ 기본계획 상 불명확 ▶ 실무상 재정사업평가위에서 판단 중	▶ 판단주체를 재정사업평가위로 명문화
시점	▶ 기본계획 상 불명확 ▶ 실무상 예타대상 선정시 판단	▶ 예타조사 이후 민자적격성 판단 대상 결정

2 (사업대상 사전확정) 사업유형별 상위계획 수립시 민자 물량 배정 등을 통해 민간투자 사업대상 사전 확정 추진

- 국립대 시설개선(전체대비 50%), 산단완충저류시설(300억원 이상) 등 시설유형에 대해 민자 물량을 사전 배정 추진
-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민자 물량 사전 배정 여부 검토

3 (주무관청 전문성 강화) 주무관청 사업 담당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PIMAC, 전문기관 등을 통한 온·오프라인 교육 추진

-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작·배포하고, 민간투자사업 실무 관련 영상강의 제공 등 추진

※ 필요시 부처별·지역권역별 집합교육 등 추진(PIMAC 협조)

V. 향후 추진일정

□ 우대점수 가이드라인 및 개량운영형 추진 관련 세부요령 마련, RFP 표준안 개정 등 추진(~9월)

□ 개량 운영형, 소규모 복합시설 개발 등 관련 시범사업 발굴* 및 성공사례 확산 등 후속조치 추진(~12월)

* 시범사업 발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추진(7월)

추진 과제		세부 추진계획	일정
① 대상시설 다양화	산업인프라	-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단 완충저류시설, 환경 복합시설, 수소 충전소 등에 대한 구체적 민자 추진방안 마련 부처합의	7월
		- ICT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평가항목 RFP 표준안 반영 자담가결	9월
	생활인프라	- 디지털박물관 민자사업 예타 신청 사업가결	'23. 上
		- 소규모 복합시설 개발 활성화 방안 관련 기본계획 개정 기본계획	6월
	노후인프라	-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노후 상수도,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에 대한 민자 추진 검토 부처합의	7월
		- 국립대 시설개선 사업 민자적격성 조사 및 '23년 BTL 한도액 반영 검토 사업가결	8월
	교통인프라	- GTX-B 시설사업기본계획안 민투심 상정 사업가결	6월
② 민간 참여유인 제고	사업방식 다변화	- 개량 운영형 도입 관련 기본계획 개정 기본계획	6월
		- 개량 운영형 추진 관련 세부지침 마련 자담가결	9월
		- 사업대상 후보군 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 부처합의	7월
		- 대장-홍대선 실시협약안 민투심 상정 사업가결	하반기
		-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철도, 환경 등 시설유형에 대한 혼합형 확산방안 마련 부처합의	7월
	수익 패러다임 전환	- 수익사업 연계 등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부처합의	9월
		- 부대사업계획 제출시 우대점수 부여(RFP 표준안 개정) 자담가결	9월
		- 부대사업 신속 인허가를 위한 기관간 협의 지원 부처합의	연중
	절차·비용 부담 완화	- 전문기관 기능 확대, 취소·철회 사업 보상기준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 개정 기본계획	6월
		- 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 한도액 상향 법정개정	하반기
		- 공모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연장 검토 법정개정	하반기
		- 우대점수 평정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 추진 자담가결	하반기
③ 민자 관리체계 혁신	민자적격성 검토 강화	- 필수 민자검토대상 예외 인정에 대한 판단절차 구체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예타수행 총괄지침 개정 기본계획	하반기
	사업대상 사전확정	-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(2단계) 등 민자물량 사전배정 가능사업 추가발굴 부처합의	하반기
	주무관청 전문성 강화	- PIMAC, 전문기관 등을 통한 온·오프라인 교육 추진 교육	연중